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노동자혁명당(준), 2020년 9월

차례

들어가며

1.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문재인 정부
2.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한 “탈미·자주” 동맹
3. 남한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노동운동 좌파
4. “종속” 문제?
“민족자주”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본질
5. 사회배외주의 -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완결판
6. 노동귀족층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좌파
7. 좌파의 노선적 후퇴: 사회주의혁명 노선의 폐기인가?
8. 자본과의 투쟁을 노동운동 내 자본 마름과의 투쟁과 뗄 수 없이 결부시켜야 한다
[보론] 남한 제국주의 하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 노선?

들어가며

노동운동은 어떻게 개량주의 세력에게 장악되었나? 계급협조주의 세력이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 거둔 기괴한 승리와 한국 자본주의의 “국격 상승” 사이에는 뭔가 연관이 있는가? 노동운동 내 민족주의 다수파의 추악한 승리와 노동자들 속에서 문재인 “촛불정부”에 대한 환상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1.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문재인 정부

이 승리가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 보여주는 다음 구절을 보라.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3년.

민주개혁세력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 이어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획득하고, 친미수구세

력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대구경북, 강남벨트로 왜소화되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으로 민족의 통일열망과 북미관계전환에 대한 기대가 하늘에 닿았던 지난 2년간의 세월이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등장하며 역대급 국격상승의 기회도 맞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과 유럽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 모든 징표들은 지난 33년을 관통했던 87년체제가 끝나고, 2020년체제가 들어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33년 전 6월항쟁의 주역들이 이제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진보운동의 지도층이 되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 주역들이 지난 촛불에서도 자녀들과 손잡고 광장에 나와 박근혜를 끌어내렸다.”¹⁾

이것이 한국 노동운동 다수파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성격규정이자 ‘시대’ 규정이다. 통칭 자민통/NL로 표현되는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정세인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누가? 우리가! 문재인 촛불정부와 함께! 그리고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린 데 이어 총선으로 친미수구세력에게 치명타를 가해 왜소화시켰다고 한다. 물론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과 함께!

민중당 (진보당으로 개칭)을 비롯한 자민통 중심 세력이 문재인 자본가정부를 내놓고 지지한다는 것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실의 선언은 이들이 지지를 넘어, (정부 입각만 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문재인/민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이 체제 (“2020년 체제”)에 역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과 계급협조 인민전선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이들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이 야당이던 시절부터 ‘민주대연합’과 ‘야권연대’의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팔아넘기고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을 민주당 지지 쪽으로 이끌어왔다. 또 촛불항쟁에서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민주당과 문재인이 가로챌 수 있게 한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도 이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다. 그런데 우리 “6월항쟁의 주역들이 이제는 집권세력이 되었”고 “이 사회의 주류가 되”었으니 노동자운동은, 노동자계급은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대정부 투쟁이나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는 투쟁은 더 이상 지양하고 노사정 대화로 정부에 협력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은 이미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왜소화되어”버린 친미수구세력에 대항하는 전선을 지켜주는 것이 제 역할이다. 이 전선의 과제·임무에 대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이렇게 말한다.

“한번 항쟁의 주역은 영원한 항쟁의 주역이다. 오히려 권한이 더 커진 만큼 책임감도 더 높아져야 한다. 2020년체제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2020년체제는 탈미, 탈세계화로 시작해보자.

코로나 재난과 경제위기는 미국, 유럽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내수와 한반도, 유라시아대륙과 동아시아에 눈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이러한 방향전환의 디딤돌을 놓는 토

1) “[사실] 6월항쟁 33주년, 87년체제를 넘어 2020년체제로”, <<민플러스>> 2020.6.10.

대구축, 제도전환에 투여되어야 한다.

2020년체제는 자주, 평등,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야 분단적폐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청산할 수 있고, 촛불항쟁이 요구하는 민주주의도 더 잘 완성할 수 있다....”²⁾

노동운동은 탈미 자주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는 동맹군으로서 충실하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계급협조 인민전선 체제를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항쟁과 박근혜 퇴진/ 민주당 집권을 계기로 노동운동 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 간의 은밀한 동맹이 공공연한 동맹으로 전화되었다.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앞서의 이명박근혜 ‘신식민지 괴뢰 친미 정권’과는 달리 탈미 자주화를 함께 시작하는 정권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미 자주화를 지향하는 정권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러한 성격규정은 나아가 “내수와 한반도, 유라시아대륙과 동아시아에 눈을 돌”리는 자주적 자본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임무 규정으로 이어진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이러한 전략적 임무 규정은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로 등장하며 역대급 국격상승의 기회도 맞고 있다”는 위 인용문의 정세인식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운동·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정부와 손잡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국과 서방에 목을 매는 예측적 재벌 천민자본주의를 탈피하고 자주적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사회대개혁’에 나서야 한다.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에 대한 지지가 이제 ‘전술적 지지’를 넘어 “2020년체제”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대”에 맞춰 변용된 엔엘 전략노선에서 본질적인 구성부분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것은 소위 최악 수구세력을 피하기 위해 차악 자유주의 세력을 옹호, 지지한다는 이른바 ‘비판적 지지’와는 완전히 질을 달리하는, 자본가정부의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고 있음을 공공연히 밝힌 것이다. 그래서 전략적 목표 달성 때까지 노동자계급은 문재인 자본가정부의 지지 부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말한다.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2020년 체제에서는 말이다.

2.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한 “탈미·자주” 동맹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손잡는 “탈미·자주” 동맹은 누구를 겨냥한 동맹인가? 기회주의 다수파는 미 제국주의/친미수구 세력을 적으로 한 동맹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대중을 적으로 하여* 한줌의 노동운동 ‘상층’과 부르주아지가 맺은 동맹이다. 기회주의 다수파 자민통 세력이 탈미·자주를 지향하는 (즉 미 제국주의에 대한 “신식민지적 종속”에서 탈피하여 자주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으로 신뢰를 두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실제로는 탈미·자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남한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의 충실한 집행위원회다. 노동해방과 평화의 최악의 적인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정부로서 문재인 정권은 탈미 대신에 반노동자적인 계급투쟁 무력화와 노동계급운동 분열책동에 주력하고,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는 전략적 맹우에 대한 탈미 기대를 접지 못한 채 맹우 편에 서서 노동자를 달래고 무마하는 데 힘쓰는 것으로 독점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한다.

2) 같은 사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탈미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는, 이들 계급협조주의 세력은 ‘비판’하고 ‘지적’하고 ‘규탄’하고 ‘촉구’하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진보민중단체들”이 성명과 논평과 시국선언을 내면서 “한목소리로 규탄”한다.³⁾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남한 자본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한·미 제국주의 동맹의 강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유지한다. “고양이 바스카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먹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같은 “‘요리사’가 오르다가 간하다가 촉구하다가 애원하다가 요구하다가 선언하다가 하는 것에 약속과 웅변과 거창한 성명으로 답하며 얼렁뚱땅 넘기고 있다. 고양이 바스카는 잔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먹는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몸을 부르주아지에게 붙들어 맨 이들 “소부르주아지 지도자들은 부르주아지를 신뢰하라고 인민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지를 신뢰하지 말라고 인민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⁴⁾

문재인 자본가 정부는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라면 탈미보다 친미를 택할 것이고, 실제로 집권 후 더욱 더 친미로 가고 있다. 제국주의 코리아를 위해서는, 자본투자처 및 시장 개척을 위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반구 반(半)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적 초과착취 노획물의 분할을 놓고 다투는 데서 더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해서는 탈미보다 여전히 친미가 더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남한 제국주의의 확대·강화를 위해서는 탈미를 통한, 예컨대 새로운 한·중 제국주의 동맹보다 기존의 한·미 제국주의 동맹이 더 유리하다고 — 거대 중국 시장이 남한 자본주의에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 문재인 정부는 보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제국주의 열강으로서 한국의 역할 증대를 갈구하는 한국 부르주아지의 지향과 친미는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 친미는 ‘종속’ 자본주의의 표식이 아니라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글로벌 지위 상승을 위한 1순위 선택지다.

다만 일본 제국주의와는 세계시장에서 이미 최대의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반일”의 기치는 놓칠 수가 없다. “국격 상승”의 최대 호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글로벌 지위 상승을 위해서는 남한 제국주의가 일차적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딛고 넘어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일 민족주의적·배외주의적 동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정치적 독립을 상실하고 이 계급휴전 배외주의에 동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자본가정부한테는 이 노동운동 다수파 ‘사회’배외주의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정부는 노동운동 다수파 사회배외주의 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잘 알고 있다. “반미” 구호 대신 “토착왜구”, “총선 한·일전” 등 반(反)미통당 자유주의 세력들의 배외주의 프레임이 노동운동에까지 널리 침투해 있는 이유다.

3)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정부가 책임” 한목소리 규탄”, <<민플러스>> 2020.6.21

4) 레닌 <우리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 레닌전집 66권 (“4월 테제”), 양효식 옮김, 아고라, 96-7쪽



▷ 반 미통당 자유주의자들의 4.15총선 웹자보



▷ 민중당 4.15 총선 캠페인 (사진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2020년 4월)

3. 남한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노동운동 좌파

그런데 이와 같은 공공연한 자본가정부 지지, 그리고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한 민족주의·배외주의 동맹이 어떻게 노동운동 내부로부터의 전면적인 반대에 부닥치지 않고 더욱 더 거침없이 노골화해 갈 수 있게 된 것인가? 노동운동 내 소수파는 이러한 부르주아지와 전략적 동맹에 대해, 계급협조 인민전선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는가?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독립을 부르주아지에게 팔아넘기고 노동자들을 계급협조 배외주의에 동원하는 다수파 사회배외주의 세력에 대해 단호히 전선을 치고 있는가?

여기에는 통칭 ‘좌파’, ‘좌단위’ 등으로 표현되는 노동운동 소수파의 노선적 약점 문제가 걸려 있고, 또 ‘좌파’를 포함한 한국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 대중이 아닌 그 특권적 소수층에 주로 기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먼저 좌파의 노선적 취약성 문제는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탈미·자주” 슬로건의 기만적 성격, 부르주아적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 따라서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는 — 문제다. 현 남한이 미국의 “신식민지”라는, 즉 1990년대를 넘어 2000년대, 2010년대에도 여전히 신식민지 (즉 반식민지)라는 주장은 오늘날 남한 독점자본이 대대적으로 남반구 반식민지 인민들을 초과착취하고 있고, 이 거대한 초과이윤의 일부를 국내에서 떡고물로 흘려한숨의 특권적 소수 노동자들을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분할지배를 획책하고 있는 추악한 현실⁵⁾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다. 노동운동 다수파는 이러한 “신식민지” 이데올로기를 엄폐물 삼아 자신들의 계급협조주의와 사회애국주의를 정당화하고 남한 제국주의

5) 남한 제국주의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국 독점자본의 세계시장 지위, 자본수출 등의 경제적 지표들로는, 이 책자에 ‘자료’로 첨부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을 보라.

부르주아지의 노동 담당 부관으로 봉사해왔다.

그런데 좌파 또한 남한 국가의 제국주의적 본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거나, 남한이 제국주의임을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 때문에 다수파의 “신식민지” 이데올로기와 탈미·자주 노선의 반노동자적 기회주의 본질에 대해 노동자들 속에서 정확히 폭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노동자들을 자본가 정부 지지와 민족주의·배외주의 동맹 쪽으로 유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대적 전선을 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는커녕 민족주의·배외주의 동맹에 대해, 좌파는 오히려 갈수록 그 방향으로 견인되고 있고 사회배외주의에 휩쓸리고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7월 한·일 무역전쟁 당시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휴전과 계급협조를 끌어내고 나아가 정권 지지로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 하에 반일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물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는 이름으로! 자본 간 쟁투, 제국주의 독점자본 간 경제전쟁을 경제침략에 대항하는 ‘(경제)주권 수호’ 문제로 포장하여 한국 인민 속에서 애국주의·배외주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호응하여 계급협조주의 다수파도 “경제주권”과 “경제자주독립”, “아베 규탄”을 내걸고 반일 애국주의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베 규탄”의 경우 그것이 왜 배외주의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아베 규탄” 슬로건 하에 ‘자’국의 제국주의 무역전쟁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자’국 정부를 지지하여 국내 계급휴전 배외주의 물이에 앞장 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의당 노동운동은 “한·일 무역전쟁 반대! 제국주의 무역전쟁을 국내 계급투쟁으로!/ 주적은 국내에 있다!” 기본 슬로건 하에 문재인 자본가정부의 이러한 정치적 노림수를 폭로하고, “애국주의적·민족주의적 보이콧 캠페인 반대/ 한·일 노동자의 국제주의적 단결 ·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적 단결”을 내걸고 싸웠어야 한다. 또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에 호응하여 반일 애국주의 물이에 앞장서며 남한 제국주의와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유리시키려는 노동운동 내 계급휴전 사회배외주의 세력을 가차 없이 비난했어야 한다.⁶⁾

그러나 노동당, 사회변혁당,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사과연 등 노동운동 좌파는 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단체 이름들을 걸고 사회배외주의 다수파와 함께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 집회를 공동개최했다. 한·일 자본 간 제국주의적 무역전쟁을 “일본의 제국주의 공세”라고 축소 은폐하여 남한 제국주의에 면죄부를 주고, “일본 제국주의에 항의하는 운동을 건설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며 반일 배외주의 광풍을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포장해주기까지 했다.

6) 이러한 입장으로는 다음을 보라.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모든 배외주의·민족주의 보이콧 캠페인 반대! 무역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자!”, 남한 혁명적 공산주의자 ·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 (RCIT) 공동성명, 2019년 7월 19일.
<https://www.thecommunists.net/home/%ED%95%9C%EA%B5%AD%EC%96%B4/trade-war-between-japan-and-south-korea/>

朝鮮
東亞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

20190720

18:00

일본 소녀상 앞

문의 농협 302-0148-1768-61 (주제준)

아베정권을 규탄하는 66개 단체(계속 추가중)

(사)겨레하나(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사)한국민족총합회 강제징용공동행동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일과거청산과강제동원문제해결을위한공동행동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자동 민주주의자통일대학생협의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로단체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새로하나 세종민주평화연대 앙심수후원회 알바노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두환양민학살심판공동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기억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외길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연방시민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시민행동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2019년 7월 20일 <경제보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 집회 웹자보

한·일 무역전쟁은 미·중 무역전쟁과 마찬가지로, 격화하고 있는 현 시기 제국주의 열강 간 패권쟁투의 일환으로서 제국주의적 경제전이다. 좌파가 이와 같이 “경제보복 아베 규탄”을 내세워 배외주의 캠페인에 동참하고 사회배외주의 다수파에 이끌려 가는 데는 정세인식 문제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민족주의 다수파를 따라 남한 자본주의를 모종의 ‘종속 자본주의’로 보아 그 제국주의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있는 문제, 즉 근본적인 노선적, 강령적 차원의 문제가 있다.

4. “종속” 문제?

“민족자주” 슬로건의 사회제국주의적 본질

제국주의 나라에서 계급협조주의 좌익이 “종속”을 내세워 ‘자’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인하고, 그럼으로써 강대국 분쟁에서 ‘자’국 정부를 지지하며 사회배외주의/사회제국주의로 노골화한 대표적인 예가 있다. 바로 스탈린주의 일본공산당 (일공)이다.

1945년에 합법화된 이래 일공 강령의 핵심 특징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데 있다. 1945년 이전에는 일본이 제국주의 열강이었지만, 그 이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1957년 9월에 일공 지도부가 발표한 (그리고 나중에 당 대회에서 채택된) 강령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기본적으로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 및 미 제국주의와의 종속적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 독점자본이다.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이지만, 사실상 미 제국주의에 의해 반(半) 점령된 종속국이다.”⁷⁾

일공은 이로부터, 당의 주 목표가 “인민민주주의혁명”이며, 이 혁명의 핵심 과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 달성이라고 결론지었다. 일공은 이 입장을 2차 세계대전 종전 70년이 넘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 중의 하나가 된지 이미 오래인 현재까지도 말이다! 2004년에 채택한 강령에서 일공은 일본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격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이긴 하지만, 그 영토의 주요 부분과 군사 문제를 비롯한 그 밖의 국가 사안들에서 미국의 통제를 받고 있는 사실상 종속국이다... 미국은 여전히 일본의 군사·외교 문제에 대한 상당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자신의 거대한 권력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일본의 경제 문제에 개입한다. 유엔과 그 밖의 국제 포럼에서 일본 정부 대표자들은 종종 미국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⁸⁾

한국의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내세우는 ‘자’국에 대한 종속국 성격규정 논리와 똑같다. ‘자’국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내세우는 “미국에 대한 종속”, “미국의 지배” 운운

7) The Fifty Years of the Communist Party of Japan, p. 136

8) 2004년 1월 17일 일공 23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일공 강령, <http://www.jcp.or.jp/english/23rd-congress/program.html>

하는 논리도 똑같다. 이로부터 “민족자주” 임무를 도출하는 ‘자’국 방어 논리도 똑같다. 다음에서 보듯, 위 성격규정으로부터 나오는 일공의 강령적 임무는 사실상, ‘자주적인 제국주의’ 국가의 수립이다.

“일본 사회가 현재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혁명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이례적인 종속과 대기업·재계의 폭압적 지배에 종지부를 찍는 혁명, 일본의 진정한 독립을 확보하고 정치, 경제, 사회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는 혁명이다. 이러한 것들은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실현 가능한 민주개혁이지만, 그 완전한 달성은 일본의 독점자본주의와 대미 종속을 대표하는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게로 국가권력을 이전하는 것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 민주적 변화를 이룩하는 데서 성공하면 인민을 고통 받게 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다수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는 자주/민주/평화의 일본을 건설하는 길을 닦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다. “자주/민주/평화” 자리에 자주/민주/통일을 대입하면 나무랄 데 없는 한국 자민통 강령이다! “대미 종속”으로 인해 현 일본 사회는 민주주의혁명 단계에 있다. 이 단계를 건너뛰어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을 내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을 차단하는 ‘단계’ 설치의 구실로 “대미 종속”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독실한 옹호자로서 일공은 이러한 (인민)민주주의혁명 단계론과 계급협조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중국·러시아·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든 영유권 주장을 지지한다. 일공은 현 강령 속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일부인 하보마이 제도과 시코탄 섬, 그리고 치시마(쿠릴) 열도의 일본 반환”을 요구한다. 일본 제국주의가 1905년 조선에게서 강탈한 독도의 경우에도 현재 일본 정부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일공은 이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공은 일본 제국주의의 굳건한 사회배외주의적 옹호자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자민통도 남한 제국주의의 사회배외주의적 옹호자로 나서고 있다. “종속”을 내세워 ‘자’국 제국주의를 은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자주”를 내세워 사회주의혁명을 차단하는 계급협조 기회주의가 이와 같이 사회배외주의로 상향 변주하는 모습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는 어디서나 똑같다.

과거 전쟁에서 미국에 패전국이자 피점령국인 일본이 현재까지도 군사·외교 면에서 미국에 종속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종속’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남반구 반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거대한 초과착취 면에서 엄연히 제국주의 국가다. 이러한 대미 군사·외교적 ‘종속’은 과거 서독 제국주의에서도 있었고, 패전이나 피점령과는 관계없는 현재의 호주 제국주의에서도 존재한다. 미국을 패권국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이러한 종류의 대미 종속과 해당 국가의 제국주의적 성격은 상호 모순되지 않으며 양립 가능해왔다. 이 점에서 제국주의 일본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한국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패권국 아닌 현 일본이나 현 한국이 민족자주를 필요로 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고자 한다면, 제국주의 열강들 중 패권국 미국을 빼고는 모두가, 즉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해 있는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같은 열강들 모두가 민족자주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해야만 할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노무현 정부 이래 현 문재인 정부까지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은 친미 기조를 유지한 채 대미 군사·외교적 ‘종속’을 탈피한다며 “자주 국방”과 “자주 외교”를 추구해왔다. 자민통 세력이 지금 내거는 “민족자주”라는 것이 과연 이러한 “자주국방”, “자주외교”와 얼마나 다른가? 이미 자민통 세력은 남한 사회의 경제적 “(신)식민지성” 주장에서는 슬그머니 한 발을 뺀 채 군사·외교적 “종속” 주장에 주력하고 있다. 또 같은 맥락에서 기존의 “민족해

방”을 대신하여 “민족자주”를 내걸고 있다. 이제 경제적 토대 상의 “해방”은 빼고 단지 군사·외교상의 “자주”라면 자유주의 부르주아 세력의 “자주국방” “자주외교”에 많이 근접해진 셈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을 ‘탈미 자주화를 함께 시작하는 정권’으로 성격규정 하고 지지하기까지 하는 상황에서 “민족자주”를 “자주국방”/“자주외교”로 등치한다 해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 자민통 세력이 드러내놓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할 수 있는 노선적 접점도 이렇게 마련되었다.

“민족자주” 슬로건의 이 같은 계급협조 기회주의적 본질을 놓고 볼 때, 현 단계 남한에서 ‘민족자주를 과제로 하는 당면 민주변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토대 자체를 겨냥한 모든 중대한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유리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눈에 흙먼지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상 남한 제국주의의 자주국방과 자주외교를 위한 이른바 “사회대개혁”에 노동자계급이 앞장서자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국방 자주외교’가 아니라 ‘미군 철수, 미군기지 해체’를 요구하고 투쟁한다. 우리의 ‘미군 철수!’ 요구 투쟁은 ‘민족자주를 과제로 하는 당면 민주변혁’의 일부가 아니라, 반 제국주의·반자본주의 당면 사회주의변혁의 일부다. 기회주의 자민통 세력에게는 ‘미군 철수’ 요구보다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의 계급협조가 우선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군 철수’ 요구 투쟁은, 이 투쟁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와의 계급협조에 종속시키는 ‘민족자주’를 위한 투쟁의 일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미군 철수’ 요구 투쟁은 한·미 제국주의 반대와 한·미 제국주의 동맹 분쇄를 위한, 한국 제국주의 부르주아 권력 타도를 위한 투쟁의 일부다. 우리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시키지 않듯이, 미군철수 투쟁 또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되어선 안 된다. ‘당면 민주변혁’이라는 이름으로 미군철수 투쟁을 자본주의 토대 자체를 겨냥한 투쟁과 분리시키려는 일체의 기회주의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따라서 미군 철수 투쟁은, 이 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과 분리시키려는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과의 대항 가차 없는 투쟁과 긴밀히 결부되어야 한다.



▷ 2019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우리는 한국이 제국주의 국가 리그에 진입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른바 “한국현대사”에서, 즉 ‘해방’ 이후 미군정 및 그 연장선상의 괴뢰 정권 하에서 한국은 식민지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반(半)식민지 종속 경제에서 탈피하지 못했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이미 한국은 독점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였지만, 그럼에도 한국 독점자본이 타국에서 초과착취 하는 것보다 외국 제국주의 독점자본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는 것이 더 컸고, 자본수출에 비해 자본수입이 훨씬 많았다. 이 점에서 당시까지 한국은 단지 군사·외교적 ‘종속’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종속적인 반식민지 독점자본주의였다. 그러나 2000년-2010년을 거치며 이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어 초과착취/자본수출 면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독점자본의 세계시장에서의 지위 같은 핵심 지점에서 “(신)식민지성”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변화 앞에서 자민통/엔엘 세력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래에 들어와 “(신)식민지성”과 “민족해방”을 슬그머니 뒷전으로 물리고 대신에 “종속”과 “민족자주”를 앞세우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했다. (“반미” 대신에 “탈미”를 내거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용어 변경 차원을 넘어, 기존의 수줍은 계급협조주의에서 공공연한 계급협조주의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 대한 ‘비판적 지지’에서 전략적 동맹으로, 기회주의에서 그 완결판인 사회배외주의로 격상해가는 중대한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더 이상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에 호소하여 “(신)식민지성”을 내세우기에는 현 단계 남한 사회구성체의 경제적 사실들과 너무도 동떨어지다보니 궁여지책으로 군사·외교적 “종속”을 내세워서라도 자신들의 남한 제국주의 지지를 감추려 시도하고, 나아가 ‘자’국 제국주의에 대한 사회애국주의적 방어를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백년도 더 전에 <<제

국주의론>>의 저자 레닌이 제국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이런 종류의 “종속”을 혁명 노선 속에 어떻게 위치 짓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보라. 당시 망명지 스위스에서 레닌은 스위스 사회민주당 당원으로 당내 좌파와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당 대회 문서들을 준비했는데, 이 문서들에서 레닌은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에 대해 제국주의 강대국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스위스를 제국주의 국가라고 명시하며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내걸고 있다.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는 제국주의 ‘대’국의 부르주아지와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긴밀히 묶여 있고, 그들 대국에 완전하게 종속되어 있다...

[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답은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적 대중행동을 선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스위스 제국주의의 특수성은 다름 아니라 스위스 부르주아지가 무권리의 외국인 노동자를 점점 더 가혹하게 착취하고 있다는 데 있다. 스위스 부르주아지의 희망의 거점은 이들 두 범주의 노동자 간의 사이를 벌려놓는 데 있다.”⁹⁾

“따라서 스위스와 관련해서도 ‘조국 방어’는 이제 위선적인 공문구 이상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기서의 문제는 민주주의나 자주독립, 또는 광범한 주민 대중의 이익 등등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르주아지의 독점과 특권을 보존 유지하기 위해 노동자와 소농민을 살육장으로 던져 넣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고, 자본가의 지배와 정치적 반동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15년 아라우 당 대회에서 이미 승인된 혁명적 대중투쟁의 목표로서, 당은 스위스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을 내건다. 이 변혁은 경제적으로 즉각 실현 가능하다...

당은, 임금노예의 처지 개선을 위한 투쟁을 멈추는 일 없이, 노동자계급과 그 대표자들에게... 스위스에서의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선전하는 임무를 일정에 올리라고 호소한다. 이 선전은 부르주아 정부를 무산 주민 대중의 지지에 입각한 프롤레타리아 정부로 대체할 필요를 논증하고, 은행 및 대기업의 몰수·수탈, 일체의 간접세 폐지, 고액 소득에 대해 혁명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단일 직접세의 실시 등과 같은 조치가 절실히 필요함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한다.”¹⁰⁾

레닌은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가 독일이나 영·불 같은 당시 최대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결코 “민족자주”와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얘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스위스에서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고 부르주아 정부를 프롤레타리아 정부로 대체하는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얘기한다.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가 제국주의 강대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스위스 부르주아 정부가 ‘부르주아 정부’일 뿐 아니라 스위스 은행자본들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라는 사실”¹¹⁾은 전혀 모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스위스 정부의 대독 또는 대영·불 “종속”과는 관계없이 스위스는 다른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 및

9) 레닌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치머발트 좌파의 임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361쪽, 375쪽

10) 레닌 <전쟁에 대한 스위스 사회민주당의 태도 (테제)>,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82, 383, 384쪽

11) 레닌 <H. 그로일리히의 조국방위 옹호에 대한 열두 개의 짧은 테제>, 레닌전집 65권 (“먼 곳에서 보낸 편지들”), 이정인 옮김, 아고라, 167쪽

국내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에 의해 노동자계급의 특권적 ‘상층’을 노동귀족으로 매수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초과이윤을 뽑아내는 제국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위 문장에 “스위스” 대신 “한국”을 대입해도 어느 한 점 어색함이 없다. 문재인 부르주아 정부가 미국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과, 문재인 부르주아 정부가 ‘부르주아 정부’일 뿐 아니라 한국 독점자본·금융자본들과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라는 사실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 바로 이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에게 우리의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탈미·자주”를 함께 시작할 정부라고 기대를 걸고 지지를 보내며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선서를 한 것이다. 이로써 다수파 자민통의 ‘자주’가 무엇을 실제 내용으로 하는 슬로건인지, 어떠한 계급적 성격을 갖는 슬로건인지 밝히 드러나 버렸다. 군사·외교적으로 보다 자주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발돋움하자는 슬로건이다.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부리는 노동운동 내 하수인들의 사회제국주의 슬로건이다.

이와 같이 “민족자주”는 남의 깃발, 적군의 깃발, 자본의 깃발이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 정부*의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며 노동자들 사이에서 자본가계급의 깃발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또 현 시기 계급투쟁에서 “민족자주”는 배반자적인 계급휴전 사회배외주의 슬로건으로 자본에 봉사한다. 기회주의 다수파가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협조 사상을 유포하는 매개로 사용하고 있는 ‘토착왜구’, ‘한일전’ 같은 사회배외주의 프레임이 노동운동에 난 데 없이 돌출한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러한 자본의 기치, 기만적인 “민족자주” 슬로건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며, 거기에 정확히 부합한다.



▷2019년 8월1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노조 집회

5. 사회배외주의 -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완결판

남한이 제국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기만적인 “종속” “자주” 이데올로기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선적 약점으로 인해 좌파는 그 동안 다수파의 계급협조주의에 대항하여 싸우지 못해왔고, 따라서 계급협조주의가 노동운동을 지배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허용해왔다. 이제 “촛불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의 집사라는 사실 또한 인정하길 거부하는 좌파는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극치인 사회배외주의와의 투쟁도 회피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부르주아 지지자들, 반 미통당 자유주의자들이 한·일 무역전쟁 이후 대중적 반일 정서를 매개로 애국주의·배외주의 물이를 대대적으로 펴고 있다. (이들이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 함께 조국 장관 방어부대를 이룬 세력들이다. 여기서도 ‘조국방어’ 세력들이다!). 이 “반일 국뽕”은 한국의 첨단산업 찬양을 거쳐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 찬양으로 이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특히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의한 한국의 “국격 상승”을 내걸고 국수주의·배외주의 감정을 전방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총선 국면에서 미통당 등 ‘수구 세력’을 겨냥한 “토착왜구”, “한·일전” 프레임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이러한 배외주의 물이의 정점을 이루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우리의 노동운동 다수파가 받아 안고 문재인 정부 지지 물이에 합세한 것이다. 같은 배외주의라도 부르주아·소부르주아의 배외주의와 구별하여 노동운동의 배외주의를 ‘사회’배외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직접 노동자들 속에서 계급휴전(국내평화) 배외주의를 조장하고, 그리하여 노동자들 속에 부르주아지의 영향력을 실어 나르며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지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아주 위험한 내부의 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배외주의는 노동운동 내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계급협조 기회주의의 직접적인 연장이자 그 완성이다. 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 당시 인터내셔널 결의 (제국주의 전쟁 반대 / 자본주의 타도)를 배반하고 “조국방어”를 내걸고 ‘자’국 지배계급의 전쟁 수행을 지지한 사회배외주의 세력이 기존의 노동운동 우파 기회주의 세력과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술적으로 동일한 세력임을 추적 확인한 레닌은 “사회배외주의는 기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결론지었다. 왜 ‘완결판’이나 하면, *사회배외주의는 제국주의 시대에 완성된 기회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을 계기로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와 문재인 자본가 정부 간의 은밀한 동맹이 공공연한 동맹으로 전화되었듯이) 제국주의 전쟁은 “기회주의자들과 부르주아지 간의 은밀한 동맹을 공공연한 동맹으로 탈바꿈시켰다.”¹²⁾

“우리가 말하는 사회배외주의란, 현 제국주의 전쟁에서 조국방어 사상을 수용하고, 이 전쟁에서 사회주의자와 부르주아지·‘자’국 정부 간의 동맹을 정당화하며, ‘자’국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적 행동을 선전하고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 아주 명백하게도 사회배외주의의 기본적인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내용은 기회주의의 토대와 완전히 일치한다. 그것은 *동일한 하나의* 경향이다. 1914-15년 전쟁의 조건 속에서 기회주의는 사회배외주의로 귀착되었다. 계급협조 사상은 기회주의의 주 특징이다....”

12) 레닌 <사회주의와 전쟁>,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46쪽

기회주의란 극소수 노동자들의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대중의 근본적인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 달리 말하면 프롤레타리아트 대중을 적으로 하여 일부의 노동자와 부르주아지 간에 동맹을 맺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은 이러한 동맹을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했고 피할 수 없게 했다. 특권적인 노동자층의 비교적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이 그들을 ‘부르주아화’한,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 민족의 자본가들이 식탁에서 흘린 빵 부스러기를 던져준 — 또 그들을 영락하고 궁핍화한 대중의 고통과 비참, 그리고 혁명적 기질로부터 격리시킨 — 저 수십 년 간의 자본주의 발전기에 고유한 특징들이 바로 이 기회주의를 낳아놓은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상황의 직접적인 계속이자 완성인데, 왜냐하면 이 전쟁은 대국 민족들의 특권을 위한, 식민지의 재분할과 타 민족들의 지배를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소부르주아 ‘상층’, 또는 노동자계급의 귀족층 (및 관료층)으로서의 그 특권적 지위를 지키고 강화하는 것, 이것이 소부르주아적인 기회주의적 희망과 그에 조응하는 전술의 자연스런 계속, 전시 상황에서의 자연스런 계속이다. 이것이 오늘 사회제국주의의 경제적 토대다.”¹³⁾

개량주의·기회주의가 그렇듯이, 그 “직접적인 계속이자 완성인” 사회배외주의도 일시적인 이데올로기적 흐름이 아니라 물질적·경제적 토대 위에 서있는 사회·정치 세력이다.

“‘사회배외주의’와 기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는 동일하다. 즉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대중을 적으로 하여 노동운동의 한층의 ‘상층’이 ‘자’국 부르주아지와 맺은 동맹이며, 부르주아지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계급을 적으로 하여 부르주아지의 종복과 부르주아지 사이에 맺은 동맹이다. 사회배외주의는 완성된 기회주의다. 사회배외주의와 기회주의는 그 정치적 본질에서 동일하다. 계급협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부인, 혁명적 행동의 폐기, 부르주아적 합법성에 순종하기,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불신과 부르주아지에 대한 신뢰 등에서 동일하다. 정치적 사상도 동일하고, 그들 전술의 정치적 내용도 동일하다. 사회배외주의는 밀레랑주의와 베른슈타인주의와 영국의 자유주의 노동자정치의 직접적인 계속이자 완성이고, 그것들의 총화이자 총결산이며 최고의 성취물이다.”¹⁴⁾

6. 노동귀족층 기반을 공유하고 있는 좌파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는 노동운동에서는 다수지만, 전체 노동자계급에서는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하여 한층의 ‘상층’만을 대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이 노동운동에 대해 (일시적인) 승리를 거둔 것은 남한 제국주의 독점자본의 초과이윤 덕이며 그것에 뒷받침을 받고 있다. 독점 부르주아지는 소수의 상층 노동자를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모종의 동맹 — 즉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대항하는*, 기회주의 다수파와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간의 동맹,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와 자본가가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항하여* 맺는 동맹 — 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 초과이윤의 일부분(그럼에도 적지 않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가능하며, 실제로 그렇게 할애했다. 한국에 앞서 이미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특권적 상층부는 수억 반식민지 인민들에 대한 초과착취에서 나오는 초과이윤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13) 레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레닌전집 59권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양효식 옮김, 아고라, 271-2쪽

14) 레닌 <기회주의와 제2인터내셔널의 붕괴>,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307-8쪽

“한중의 부국들은... 독점을 거대한 규모로 발전시켰고, 수십억은 안 될지라도 수억에 달하는 초과이익을 획득하고 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수억 주민들의 등 위에 ‘타고 앉아서’, 특히 풍부하고, 특히 기름지며 손쉬운 노획물의 분할을 위해 서로 싸우고 있다....

제국주의 ‘대’국의 부르주아지는 그 초과이익이 연간 약 10억 프랑에 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자’국 노동자의 상층에 1억 프랑쯤을 지출함으로써 이 상층을 매수할 수 있는 경제적 가능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 작은 ‘떡고물’이 노동 장관들, ‘노동자 의원들’, 전시산업위원회의 노동자위원들, 노동관료들, 편협한 직업별 노조 소속 노동자들, 사무소 직원들 등등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¹⁵⁾

“제국주의의 변호론자들인 노골적인 사회배외주의자들”¹⁶⁾이 기반하고 있고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권적 노동자 상층이다. 오늘 한국에서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이 노동귀족층이 흔히들 말하는 ‘민주노조운동 개량화·관료화’의 기수들이고, 오늘 민주노총 조합원 대중을 비롯한 미조직 노동자 대중 속에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진원지이다. 이 한중의 노동귀족층 (및 노조관료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경제적 사실 (제국주의 초과이익에 의한 ‘떡고물’ 등)과 *계급 상호관계에서의 변화*는 “제국주의 시대의 객관적 조건이 지시하는 노동운동 전술의 초점이다.”¹⁷⁾

“기회주의자들(사회배외주의자들)은 *다름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등 위에 올라 타 제국주의 유럽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게 협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객관적으로 *기회주의* 자들은 소부르주아지의 일부이며, 또한 제국주의적 초과이익에 매수되어 자본주의의 경비견이자 노동운동을 타락시키는 자로 전향해버린 노동자계급 특정 층이라는 것”¹⁸⁾

마찬가지로 자민통/NL로 통칭되는 남한 노동운동 다수파도 수억 반식민지 인민들의 등 위에 올라타 제국주의 코리아를 만들어내기 위해 문재인 자본가정부에게 협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는 소부르주아지의 일부이며, 부르주아지의 종북, 따까리이자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실어 나르는 전달자로서 노동운동을 타락시키는 자들이다. “노동운동이 이들 기회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면*, 노동운동은 부르주아적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될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제국주의의 객관적 조건이 지시하는 노동운동 전술의 초점”은 자본과의 투쟁을 계급협조주의 세력과의 투쟁과 떼어 수 없게 합체시키는 데 있다. 노동운동 내 자본가계급의 마름과의 투쟁 없이 자본가계급과의 투쟁은 없다!

부르주아 노동운동, 즉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가 지배하는 노동운동은 모든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그 정치적 표현으로서 부르주아 노동자당을 만들어낸다. “모든 나라에서 부르주아지는 이미 자신을 위해서 사회배외주의자들의 ‘부르주아 노동자당’을 낳고 기르고 보호해왔다.”²⁰⁾ 진보당과 같이 뚜렷한 형태를 갖춘 당²¹⁾과, 말하자면 반쯤 형태를 갖춘 각종 “진보민중

15)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희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11-2쪽

16) 같은 글 299

17) 같은 글 309

18) 같은 글 303

19) 같은 글 305

20) 같은 글 314

21) 정의당은 부르주아 노동자당보다는 그냥 부르주아 당이다. 정의당은 노동운동에도 일부 발을 걸치고 있지만, 주로 소부르주아·중간계급 대중에 기반하고 있다. 이 기반을 민주당과 공유하며 동시에 이 기

단체”, 연합조직 등과 같은 준(準)당 간의 차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으로 볼 때 노동귀족층이 부르주아지 측으로 탈주할 조건이 무르익었고, 기정사실로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사실이, 이러한 계급 세력관계에서의 변동이 어떠한 꼴로든 정치적 형식을 발견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²²⁾

“이와 같은 경제적 기초 위에서 현대 자본주의의 정치적 제도들 - 언론, 의회, 노동조합, 정당 등 - 이 품위 있고 온순하며 개량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사무고용원들 및 노동자들의 경제적 특권과 떡고물에 대응하는 정치/적 특권과 떡고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정부나 전시산업위원회에서의 직책이나 의회와 다양한 위원회들에서의 직책, ‘품위 있는’ 합법 신문의 편집진, 또는 못지않게 품위 있는 ‘부르주아적 준법’ 노동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의 직책 등, 이와 같이 수입이 괜찮은 안락한 제도권 자리들이 바로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가 ‘부르주아 노동자당’의 대표자들과 지지자들을 유인하고 보상하는 미끼인 것이다.”²³⁾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는, 그것도 다름 아닌 노동자들 속에서 부르주아지에게 봉사하며, 부르주아지의 영향을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에게로 실어 나르는 부르주아 노동자당/부르주아 노동운동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결연하고 가차 없는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사회주의도, 노동자권력도, 사회주의 노동운동도 다 공리공담이 될 뿐이다.

그러나 좌파는 부르주아 노동자당/부르주아 노동운동과의, 즉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의 투쟁을 회피한다. 그 때문에 노동운동이 이들 기회주의자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부르주아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되는 데 좌파도 일조한다.

좌파는 현재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노동자 대중을 적으로 하여 문재인 자본가정부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 그로 인해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독립성을 잃고 부르주아지에게 종속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남한 제국주의 독점 부르주아지가 소수의 특권적 상층 노동자를 계급협조주의로 유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대중에 대항하는 전략적 동맹을 만들어 내는 데에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일부를 할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좌파는 남한 제국주의의 이러한 경제적 사실과 그에 따른 계급 세력관계의 변화를 인정하길 거부한다. 그리하여 노조운동에서 한 귀퉁이를 차지하는 것에, ‘만년 결방살이’로 남아 있는 것에 만족해하며,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개량주의 노동운동으로 머무르게 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좌파 또한 다수파와 마찬가지로 노동자 대중과는 구별되는 한줌의 노동귀족층에 운동기반을 두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노동운동의 소수파로서 좌파도 동일한 노동귀족층/노조관료층 기반 위에서 있는 것이다. 좌파가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에 대해 “모든 전선에서 결연하고 가차 없는 투쟁을 벌이지 않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7. 좌파의 노선적 후퇴: 사회주의혁명 노선의 폐기인가?

위에서 언급한 좌파의 노선적 취약성은 이제 점점 더 노동귀족층에 영합하면서 노선적 후

반을 놓고 민주당과 다툰다.

22) 같은 글 314

23) 같은 글 315

퇴,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주의혁명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남한 국가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인정하길 거부하며,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의 “신식민지” “종속” 이데올로기와 “민족자주” 슬로건의 기만적인 부르주아적 성격을 노동자들 속에서 폭로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더욱 더 견인될 경우 노선적 타락은 어느 면에선 예견된 일이다. 특히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자본가정부를 위한 전략적 동맹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세 속에서 견인되고 있다면 말이다.

최근 좌파는 새롭게 “사회주의”를 내거는 것으로 계급협조 다수파의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 및 민족주의와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 “사회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의 프로그램·전술로 제출된 사회주의가 아니다. 너무 일반적이며 너무 막연하게도 그냥 목표로서의 ‘사회주의’ 일반, 자본주의의 대립물로서의 사회주의 일반이다. 이런 사회주의라면 계급협조주의자들도, 개량주의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깃발은 올렸지만, 이 깃발에서 *사회주의혁명*은 먼 훗날에나 가능한 일, 사실상 언제인지 보이지도 않는 먼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사회주의혁명 투쟁을 대신하여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이, 사회주의혁명 강령·전술을 대신하여 “전투적 노동조합의 요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한 예를 보자. ‘혁명적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최근 노동당, 사회변혁당과 ‘사회주의 대중정당’ 건설 논의를 함께 하고 있는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이하 노해투)은 얼마 전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날 쇠퇴기 자본주의’ 조건에서는 최소강령적 기본 요구를 위한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으로 사회주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그동안 노동운동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상당한 대중적 확대를 이룩했고, 노동운동이 전체 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정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상승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노동운동의 대중적 투쟁요구와 사회주의 강령 사이의 간극은 좁아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은 여전히 준비기의 과제에 머물러 있다. 한국 노동자계급이 당장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최대강령을 실현할 준비가 돼 있다거나, 그것이 당면의 직접적인 투쟁요구로 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주의자는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생활임금 쟁취, 중대재해처벌 특별법 제정 등 오늘날 한국의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진실로 그것을 실현하려는 투쟁과 연결된다면, 이행강령의 성격을 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와 맞장 뜨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이윤논리를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서는, 자본가국가의 억압에 맞서 노동자 총단결로 맞받아치지 않고서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서 사회주의로 진격하지 않고서는 결코 전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혁명이 아닌 준비기에 노동조합은 노동자대중의 고유한 투쟁기구로 전면에 부상한다. 게다가 자본주의 쇠퇴 시기에 노동조합의 사활적인 기본 투쟁강령은 이행강령의 요구와 중첩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강령은 전투적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 안는 것과 뺄 수 없이 연결된다. 전투적 노동조합의 요구들과 분리된 채, 즉 당면 계급투쟁의 실제 요구들과 분리된 채 무언가 사회주의적인 것 같은 멋진 차별적 요구들을 고안하려는 것은 진정한 사회주의 강령의 정신과 동떨어진 것이다...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노동조합을 비롯해 노동자 민중의 조직들이 제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 기본 요구들이 단순히 준비기 요구로서만이 아니라 이행강령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²⁴⁾

간단히 말해서 노동운동이, 노동자계급이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을 수행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쇠퇴기 자본주의’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당면 투쟁 요구조차도 사회주의혁명 투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해고 금지’, ‘비정규직 철폐’ 등 최소강령 요구 수준의 기본적인 당면 요구로도 충분하다. ‘몰수·국유화’와 ‘노동자정부’ 같은 이행강령의 다른 핵심 요구들 없이도 말이다. 즉 최대강령과 맞닿아 있는 ‘은행·대기업 몰수’, ‘평의회와 민병, 공장위원회에 기반한 노동자정부’ 같은 요구들을 함께 내걸지 않아도, 최소 당면 요구만으로도 ‘쇠퇴하는 자본주의’ 조건 때문에 혁명적 강령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최소 당면 요구들을 위한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은 ‘쇠퇴기 자본주의’ 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대강령 요구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므로!

쇠퇴하고 썩어 들어가는 (부후화 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계속되는 공황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고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현 시기 자본주의 하에서 재앙과도 같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대답은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사회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혁명적 대중행동을 선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는 쇠퇴하는 자본주의의 단말마적 고통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반동적 공격에 대항하는 혁명적 대중투쟁 전술을 체계적이고 끈질기게 선전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감행해야 하며, 그리하여 대중에게 이 고통과 재앙의 진정한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는 “개량주의적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투쟁을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시적 곤란과 패배에 굴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집요하게 그러한 혁명적 투쟁을 선전하고 준비하는 것이다.”²⁵⁾

이와 같이 ‘쇠퇴하는 자본주의’는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이행강령을 내걸 것을 요구한다. 또 혁명적 대중행동 전술을 요구한다. 그러나 노해투는 쇠퇴하는 자본주의 덕분에 최소 당면 요구들로 제한해도 된다고 한다. 또 혁명적 대중투쟁 전술을 대신하여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 전술로 한정해도 된다고 한다. ‘쇠퇴하는 자본주의’가 오히려 사회주의혁명 강령·전술을 폐기하기 위한 알리바이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시대의 자본주의, 쇠퇴 사멸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로 이행해가는 자본주의는 레닌의 표현대로 “프롤레타리아 사회혁명의 전야”다. 물론 우리는 이 ‘시대’ 범주를 소(小)시기 정세 규정으로 오인하여 그로부터 항상 ‘혁명적 정세’를 기계적으로 도출하는 오류에 빠져선 안 되며, 이 시대 내 해당 시기의 구체적인 계급 세력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세 파악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노해투처럼 “준비기” 논리로 사회주의혁명 강령·전술을 폐기하고 그것을 최소요구와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 전술로 대체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그것은 ‘혁명적 사회주의’가 아닌 경제주의이며, 따라서 노동자의 소수층의 일시적 특권을 대변하며 대중의 근본 이익을 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회주의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은 ‘은행·대기업 몰수’와 ‘노동자정부’ 같은 요구강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착수하는 것을 먼 훗날로, 막연한 미

24)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 최영익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 http://nht.jinbo.net/bbs/board.php?bo_table=online1&wr_id=632&page=4

25) 레닌 <스위스 사회민주당 내 치머발트 좌파의 임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아고라, 364쪽

래로 연기하고 지체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기”는 말 그대로 준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정세 조건에 관한 것이지, 준비 임무를 폐기하고 후퇴와 타락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체계적인 선전을 즉각 전개하고 노동자들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는 데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비정규직 철폐’ ‘모든 해고 금지’ 같은 최소 당면 요구 투쟁에 대해서는 기권해도 괜찮다는 의미인가?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투쟁이 우리가 개량을 위한 투쟁을 방기할 수 있거나 방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공을 이룰 것인지, 객관적 조건이 얼마나 빨리 이 혁명의 발발을 가능케 할 것인지 미리 알 수 없다. 우리는 모든 개선, 대중의 처지를 바꾸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정치적 개선을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우리와 개량주의자들 (즉 계급협조주의 다수파) 간의 차이가 그들은 개량을 찬성하는 데 반해 우리는 개량을 반대한다. 이런 것인가? 아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들은 개량에 자신을 가두며, 그 결과 허리를 굽혀 자본주의의 간호병 역할을 구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비타협적으로, 요구를 구부리지 말고 투쟁합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다. 직접적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생각을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이 혁명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조직 활동의 모든 영역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가장 으뜸가는 임무로 삼읍시다.’

위대한 역사적 강령의 공표가 거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강령은 혁명적 계급의 이름으로 선언되어야 하며, 그 혁명적 계급의 강령은 두려움 없이 완전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주의 강령”을 선언하면서 선언에서 말해야 할 것을 말하지 않은 채로 놔둠으로써 운동의 경제주의적·조합주의적 타락을 가중시키는 것, 그것은 사회주의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오늘 좌파가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의 투쟁을 노동운동의 주요한 임무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그리고 또한 좌파가 점점 중도주의자들의 자리로 이동해가고 있는 이유다. “자본주의와 맞장 뜨”고 “사회주의로 진격”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주의혁명을 내부에서 가로막고 있는 계급협조 다수파에 대항해서 어떠한 투쟁도 수행하지 않을 때 이것이 카우츠키적 중도주의 정치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무력한 공문구와 좌익적 호언장담과 기회주의적 실천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8. 자본과의 투쟁을 노동운동 내 자본 마름과의 투쟁과 뗄 수 없이 결부시켜야 한다

혁명가들은 부르주아 노동자당/ 부르주아 노동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한층의 특권적 소수 노동귀족층과 “진정한 다수인 프롤레타리아 ‘하층 대중’을 구분하고, 그 하층 대중에게 호소한다. 이것이 바로 맑스주의적 전술의 핵심이다!”²⁶⁾ 계급협조주의 다수파가 대표하고 있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소수층 밖에 없다. 좌파가 이 특권적 소수층을 두고 다수파와 경쟁한다는 것은

26)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20쪽

스스로 계급협조주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을 뜻할 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낮고 더 깊게 현실의 대중 속으로 내려가 계급협조 기회주의 세력과의 가차 없는 투쟁에 의해 노동자 대중과 새로운 노동자 전위층, 혁명을 위해 교육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가 여전히 사회주의자이기를 원한다면, 더 낮고 더 깊게 현실의 대중 속으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것이 기회주의와의 투쟁의 모든 의미이며 모든 내용이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배외주의자들이 실제로는 대중의 이익을 배반하고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노동자 가운데 소수층의 일시적 특권을 옹호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부르주아 사상과 영향의 전달자라는 사실, 그들이 실제로는 부르주아지의 동맹자이며 하수인이라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우리는 대중에게 그들의 진정한 정치적 이익을 분간하는 것을 가르치고,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 휴전의 모든 길고 고통에 찬 정세 변전을 거쳐 사회주의를 위해, 혁명을 위해 투쟁하는 것을 가르친다.

기회주의와의 단절이 피할 수 없고 필요하다는 것을 대중에게 설명하는 것, 기회주의와의 가차 없는 투쟁에 의해 대중을 혁명을 위해 교육시키는 것, 민족적 자유주의 노동자 정치의 온갖 추악함을, 은폐가 아니라 폭로하기 위해서 전쟁의 경험을 이용하는 것, 이것이 세계 노동운동에서 단 하나의 맑스주의적 방침이다.”²⁷⁾

자본주의 지배계급이 성공적으로 그 지배를 지속해온 것은 지배계급 자신의 내적 힘 때문이 아니라 지배계급이 노동운동 내 기회주의 다수파로부터 받는 지지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힘은 자본주의 자체, 또는 자본주의 제도·기구들에 있지 않다. 자본주의가 살아남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본주의가 노동자 조직들 속에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오직 그 때문이다.

성공한 사회주의혁명인 러시아 혁명의 과정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열에 아홉은 노동자 조직들 속의 부르주아 영향력에 대항하는 투쟁, 노동운동 내 부르주아지의 시종, 대리인과의 투쟁이다. 자본과의 투쟁과 노동운동 내 자본 마름과의 투쟁은 분리될 수 없다. 기회주의·사회배외주의와의 투쟁 없이 자본주의·제국주의와 투쟁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투쟁을 계급협조 기회주의 다수파에 대항하는 투쟁과 떼어 수 없이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남한 제국주의 하에서 노동운동 전술의 중심축이다.

* * *

[보론] 남한 제국주의 하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 노선?

남한이 “미제국주의에 의해 예속되어 있”는 “식민지적 자본주의”라고 규정하면서도,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 지지에 반대하고 “혁명”을 내거는 민족해방 경향의 세력도 있다.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가 지난 4월 초에 낸 <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 정세에 대한 인식과 실천과제)>²⁸⁾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혁명 없이

27) 같은 글 320-1쪽

28)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63&sca=%EC%84%B8%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며, ‘사회주의 대중화’와 ‘사회주의 강령’을 내걸지만 개량주의·의회주의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좌파를 겨냥하여 “한국 노동운동 일각에서 보듯이 혁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회주의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은 기만이다”라고 선포한다.

훌륭하다! 그런데 <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하 <현 정세...>)이 “전제로 하는” 혁명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고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혁명, 즉 사회주의혁명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다. 권력이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그대로 있는 “당면 민주주의 혁명”이다. “한국 노동자·민중의 당면한 역사적 과제: 민중주도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을 말하며, 직접적인 사회주의 혁명에 반대한다.

현 시기 한국 사회에 당면한 혁명은 자본가권력을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혁명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기만적인 ‘민주 대 반민주(“파쇼”)', ‘식민지적 천민자본주의 대 건강한 자주적 자본주의’ 프레임을 노동자들에게 들씌우려 한다. “민주주의 혁명과 민족해방 혁명 같은 중간적 단계들을 한꺼번에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좌익기회주의이다.” 건너뛰고 말고 할 그러한 “단계” 설정의 근거 자체가 없는 현 남한 사회에서 “당면의 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내세워 노동자권력과 사회주의혁명을 가로막으려 한다.

“국가보안법과 국정원, 집시법을 비롯한 반민주악법, 노동자의 단결 투쟁을 원천봉쇄하는 노동악법 등... 파쇼헌법”에 입각한 “파쇼적 정치체제와 그것의 물적 토대인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 경제체제(재벌과 부동산 소유자의 수탈)를 해체”하는 “과제부터 도전해야 한다.” 단계를 건너뛰어 “높은 단계의 혁명” 과제에 동시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 즉 “파쇼적 정치체제”를 해체하는 과제부터 도전해야지, 그와 동시에 의회민주공화제의 자본가적 본질을 건드리는 과제에 도전해선 안 된다. 반민주악법과 노동악법 철폐 과제부터 도전해야지, 그와 동시에 경찰·관료·군대 등 억압 국가기구 철폐 과제에 도전해선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억압기구를 대체할 인민무장/프롤레타리아 민병과 노동자평의회 구성 과제에도 도전해선 안 된다. 또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과제부터 도전해야지, 그와 동시에 고도로 발달한 남한 독점자본주의 자체를 침해하는 과제에, 즉 은행·대기업 몰수, 노동자통제 하의 국유화 같은 과제에 도전해선 안 된다. 일단은 최소요구만 따로 떼어내서 내걸어야지 처음부터 최소요구와 최대요구를 잇는 이행강령 풀세트로 내걸어선 안 된다. 처음부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 투쟁에 결합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좌익기회주의이다.”

당면 혁명은 “파쇼적 정치체제를 해체하는” 단계의 혁명,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를 해체하는” 단계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부연한다. “그 단계에서도 인간해방·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중간적 단계들을 한꺼번에 건너뛰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따라서 좌익기회주의이다.” “추구”는 하되 건너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추구”라는 말로 연속혁명의 뉘앙스를 풍기지만, 결국은 동시에 도전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쇠퇴·사멸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그것도 파국적 공황기에 당면 최소요구와 최대요구를 가교로 잇는 이행강령을 (<임박한 파국, 그것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같은 요구강령조차도) 내걸어선 안 된다는 것이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민주주의 투쟁에 결합시키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달이 지체되고, 따라서 반봉건적 과제가 걸려 있는 나라들에서 맑스주의자들은

[EA%B3%84%EC%A0%95%EC%84%B8\(%EA%B2%BD%EC%A0%9C\)](#)

연속혁명의 관점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단계’를 구분했다. (역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들, 즉 반봉건적 과제가 해소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그러한 ‘단계’ 구분의 필요도 따라서 해소된다.) 연속혁명을 거부하고 양자 사이에 차단벽을 쌓는 혁명 ‘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각 단계에 고유한 과제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맑스주의자들은 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예컨대 볼셰비키 당의 ‘3대 기둥’ 강령 (봉건 지주제 철폐, 군주제 타도/민주공화제, 8시간 노동제)에서 보듯이 자본주의 토대는 건드리지 않는 반봉건 부르주아적 과제들로 한정했다. 반봉건적 과제가 걸려 있는 조건에서 반자본주의적 과제, 사회주의혁명 과제와는 구분하여 그 반봉건적 과제의 당면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봉건 지주제가 온존해 있던, 3대기둥 강령 당시의 러시아에서 사회주의혁명과는 구분되는,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에 도전하는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내거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당면” 혁명으로 엄밀히 규정하는 것은 사회주의혁명과의 분리벽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중단 없는 연속혁명의 한 부분으로 — 제1단계로, 즉 첫 단추로 —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반봉건적 과제가 해소되었고 독점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 단계 남한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본주의 기초 자체를 겨냥한 중대한 투쟁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을 유리시키기 위한 것, 즉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을 차단하기 위한 것 이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다. 현 단계 남한의 반민주악법·노동악법 철폐 과제는 반봉건적 과제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반민주악법·노동악법은 남한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혁명이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린 모든 발달한 자본주의 나라들, 제국주의 나라들에서도 형태를 달리하며 존재한다. (잔학한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로 촉발된 현 미국 민주항쟁을 겨냥하여 트럼프 정부가 고물창고 속에서 꺼내든 ‘봉기진압법’을 보라. 그리고 미국의 경찰법 자체가 최악의 “반민주 악법”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악법 철폐 과제를 위해 사회주의혁명과는 별개의 혁명 단계를 설치하자는 것은 사실상 혁명에 반대하는 것, 예를 들어 촛불항쟁으로 그쳐야 하며, 그것을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는 혁명으로 확대·강화시키는 것에는 반대하겠다는 것이다.

“당면 민주주의혁명”이 아니라 이러한 악법 철폐를 위한 *민주주의투쟁*은 현 단계 남한에서도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 후퇴’에 반대하는, 민주적 제 권리 침해에 대항하는 민주주의투쟁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촛불 정권” 하에서도 민주주의투쟁은 가능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는 악법 철폐 같은 민주주의 요구를 개량주의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관철하며, 이러한 비타협적인 일관된 민주주의투쟁을 계급협조주의·기회주의와의 투쟁과 긴밀히 결합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혁명적 민주주의투쟁과, 악법 철폐 과제를 위해 “당면 민주주의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주의혁명과 분리되는 별개의 단계를 설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후자에서는 악법 철폐 과제에 먼저 도전하고 그런 다음에야 반자본주의적인 과제, 사회주의혁명 과제에 도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동시에 도전하면 “좌익 기회주의”이므로!) 이 같은 “당면 민주주의혁명”은, 거기에 아무리 “사회주의를 지향목표로 하는”이라는 문구를 수백 번 갖다 붙인다 해도 결국은 악법 철폐와 같은 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으로 확대·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 투쟁과제를 개량주의적 방식으로가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러한 ‘혁명’일 것이다. 즉 촛불 민주항쟁의 성과물을 자유주의 부르주아지에게 헌납한 이른바 “촛불 혁명”과 같은, 그러한 류의 ‘혁명’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면 민주주의혁명”은, “식민지적 자본주의”가 아닌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인 현 단계 남한에서는 사회주의혁명으로의 확대·강화를 차단하는 *민주주의 반혁명*일 것이다. (“지대추구적 천민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경제민주화 요구, ‘건강한 자주적 자본주의’ 요구는 경실련 등에게나 짚버려라!)

한편 “파쇼적”이지는 않은 자본가 정부인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은 어떤가? “지대추구적 천민자본주의”의 이해보다는 고도로 발달한 독점자본주의의 이해를 대표하는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항하는 투쟁 말이다. “혁명”과 “현 정세”를 말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입장 글 전체를 통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 민주주의혁명 단계이므로 혁명으로 “파쇼적 정치체제”만 해체해야지 쫓겨나지 않는 민주정부는 혁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인가? “당면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엄폐물로 내세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가리려한다.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는 달리 “혁명”을 내걸지만 그러면서도 혁명의 근본 문제인 국가권력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동자·민중은 이 역사적 시기에 사회주의를 지향목표로 하는 민주주의 혁명으로 펼쳐나서야 한다. 그 민주주의 혁명은 부르주아계급이 아니라 노동계급과 소시민이 주도하는 민중혁명이며, 대외적으로 민족자주적이고 대내적으로 사회진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 의미에서 급진적이다”²⁹⁾

“혁명”을 말하고 “노동계급과 소시민이 주도하는 민중혁명”이며 “급진적”인 혁명이라고 외치지만, 그럼에도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에는 반대해야 하니 권력 문제에선 모호한 채로 머물 수밖에 없다.

한 계급의 수중에서 다른 계급의 수중으로 권력이 이전한다는 의미에서의 혁명은, 현 단계 남한 사회에서는 오직 사회주의혁명 밖에 없다. 따라서 현 단계 남한에서의 노동자권력/사회주의혁명에 반대하는 “민중 주도 급진적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수립되는 권력은 부르주아 권력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현 정세...>가 내거는 “혁명”은 멘세비키 단계론적 혁명이다. 즉 “혁명적 강령의 실행을, 소부르주아지에게 ‘더 적합하고’ ‘더 대중적이며’ 더 받아들이기 쉬운 목표점으로부터 시작하길 원”³⁰⁾하고 있다. 일단 이 “민중 주도 급진적 민주주의” 강령이 받아들여지면, 이 강령은 자동으로 다음 단계, 즉 사회주의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논리가 틀렸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리 “급진적”임을 자임하더라도, 아무리 스스로 “민중 주도” 권력을 자임하고 “혁명적 민주주의” 독재를 자임하더라도 그것은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의 정권 같은, 사회주의혁명으로 이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노동자권력/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반대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차단하는 부르주아 보나파르트주의 정권 이상 이 아닐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의 정권이 “사회주의를 지향 목표로 하는” 정권이라는 믿음을 견지하고 있지만 말이다.)

<현 정세...>는 시효가 지난 민족·민주 강령을 가지고 “한국 노동자·민중의 당면한 역사적 과제”에 도전하자고 한다. 선진 계급에게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눈을 돌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29) <현 정세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63&sca=%EC%84%B8%EA%B3%84%EC%A0%95%EC%84%B8\(%EA%B2%BD%EC%A0%9C\)](http://dli.nodong.net/gnu5/bbs/board.php?bo_table=webzine&wr_id=763&sca=%EC%84%B8%EA%B3%84%EC%A0%95%EC%84%B8(%EA%B2%BD%EC%A0%9C))

30) 레닌 <유니우스 팸플릿에 대하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33쪽

“전 유럽에서 1793년과 1848년에 *객관적으로* 일정에 올라 있었던 것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역사적 상황에 조응했던 것은 그 당시 존재했던 민주주의의 “진정으로 민족적인”, 즉 민족 *부르주아적인* 강령이었다. 1793년에 이 강령은 부르주아지와 평민의 가장 혁명적인 분자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1848년에는 이 강령이 마르크스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 전체의 이름으로 선언되었다. *객관적으로*, 당시 봉건적·왕조적 전쟁들에 대항하여 혁명적 민주주의 전쟁들, 민족해방 전쟁들이 수행되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역사적 과제의 내용이었다.

현재 유럽의 가장 큰 선진국들의 객관적 상황은 다르다. 우리가 일시적인 후퇴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진보는 오직 *사회주의* 사회를 향해서만, *사회주의혁명*을 향해서만 가능하다.”³¹⁾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내세워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면서도 계급협조주의 다수파와는 달리 개량주의와 의회주의에 반대하고 “혁명”을 내걸고 있다는 점에서 <현 정세...>는 자민통 노선에 좌익적 외피를 씌어주는 중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도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지향 목표로 하는” 운운하지만, 그러한 “악법 철폐!” 등 민주주의 요구들 이상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 민주주의 요구들을 프롤레타리아혁명 목표와 결합시키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도주의자들은 이러한 요구들을 중심으로 별도의 민주주의혁명 단계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계급투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노동자계급을 부르주아에게 정치적으로 종속시킨다.

중도주의자와는 달리, 사회주의 노동운동은 민족적 권리의, 일관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가장 확고한 주창자여야 하며, 이러한 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투쟁을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무장봉기를 통한 사회주의혁명의 전략적 과제와 결합시켜야 한다. 민족해방 과제가 걸린 식민지 조건에서도 민족자결과 독립 등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확대·강화시켜야 한다”고 하는 레닌의 다음과 같은 선언을 보라.

“모든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 제출된 식민지의 즉각적인 해방 요구 또한 일련의 혁명 없이는 자본주의 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사회민주주의가 이 모든 요구를 위한 즉각적이고 가장 단호한 투쟁을 거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거부는 부르주아지와 반동을 이롭게 해줄 뿐이다). 반대로, 그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이러한 요구들이 개량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혁명적 방식으로 정식화되고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 합법성의 경계를 넘어 나아가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회 연설과 구두 항의를 넘어 대중을 결정적인 행동으로 끌어들이며, 모든 기본적인 민주주의 요구를 위한 투쟁을 부르주아지에 대한 직접적인 프롤레타리아적 공격으로까지, 즉 부르주아지를 수탈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까지 확대·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혁명은 어떤 대규모 파업이나 거리 시위나 기아 폭동이나 군사 반란이나 식민지 반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드레퓌스 사건이나 차베른 사태 같은 정치적 위기의 결과로도, 또는 피억압 민족의 분리독립에 관한 국민투표 등과 연계해서도 터져 나올 수 있다.”³²⁾

<현 정세...>가 말하는 악법 철폐를 비롯한 “민중 주도 민주주의” 과제들, “급진적 민주주의” 과제들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온전히 실현될 수 없다. 즉 여전히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권력이 그대로 있는 “당면 민주주의혁명”을 수십, 수백 번 한다 해도 실현될 수 없다. 오직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확립하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31) 같은 글 28쪽

32)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테제)>, 편집부 엮음 <<맑스-레닌주의 민족운동론>, 버리, 159쪽. (강조 밑줄은 인용자)

민주주의 요구들을 위한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이 이끌어야 한다. 민주주의 대중운동이 부르주아 또는 소부르주아 세력에 의해 이끌릴 때 사회주의자들은 그 운동 내부에서 싸워야 하며 노동자계급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행동하도록 싸워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자계급의 독립을,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을 준비하기 위해 대중 투쟁기관 (행동평의회, 정당방위대, 소비에트 등등) 구성을 내걸고 그 필요성을 대중 속에서 끈질기게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들은 당면 요구/민주주의 요구 투쟁을, △은행·대기업 몰수 △노동자의 무장 △노동자정부 등과 같은 주요 이행강령 슬로건에 대한 체계적인 선전과 항상 결합시켜야 한다.